

제3주제

도시민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대응과 과제

송 미 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도시민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대응과 과제¹⁾

I. 서론

- 농촌의 최대 현안 과제 중 하나는 인구 감소이다. 일정 지역에 적정 인구가 유지되지 못하면, (1)정주에 필요한 시설이나 서비스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에 그 질은 감소하게 되고 (2)전후방 연쇄효과나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제활동도 제약이 따르게 되며 (3)지역자원의 유지, 보전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4)지역 사회의 전반적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
- 이 글에서는 농촌 지역사회 발전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인구 유입을 위한 지자체의 대응 방안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농촌의 정주여건의 현황과 변화 전망을 주로 농촌 인구의 관점에서 파악해보고, 유사한 시도를 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며, 구체적 대안은 제시할 수 없지만 거시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이 글은 송미령 외(2006),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대안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성주인(2006), “도시민의 전원지향 수요 확대와 농촌의 미래상”, 농업전망 20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성주인(2007),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도전과 쟁점”, 농업전망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II. 농촌의 정주 여건 현황과 변화

1. 인구 감소

- 행정구역으로 읍·면부를 합한 농촌의 인구는 2005년 통계 기준으로 전국 인구 대비 18.5%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면 지역 인구가 두드러지게 감소한 반면, 읍 지역 인구는 1995년 이후 늘어났다.
-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 경기도와 접한 충남북 일부 지역 등에 주로 분포한다. 특히 이는 대도시권 읍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신활력지역 등 대도시권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의 경우는 읍 지역이라 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였다.

<표 1> 연도별 농촌 인구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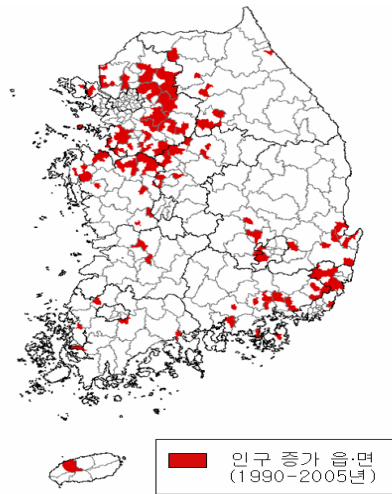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증가율(%) (1990-2005)
전국	43,411	44,609	46,136	47,279	0.6
동부	32,309	35,036	36,755	38,515	1.2
읍·면 계	11,102	9,572	9,381	8,764	△1.6
- 읍부	3,604	3,484	3,756	3,944	0.6
- 면부	7,498	6,088	5,625	4,820	△2.9
읍·면 비중(%)	25.6	21.5	20.3	18.5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표 2> 읍 유형별 인구 추이 비교

(단위: 명 %)

구 분	평균 인구(2005)	연평균증감율(1990-2005)
수도권 및 광역시 소속 읍	32,362	4.1
일반 농촌지역 읍	19,972	△0.2
신활력지역 읍	11,541	△2.3



[그림 1] 인구 증가 읍·면의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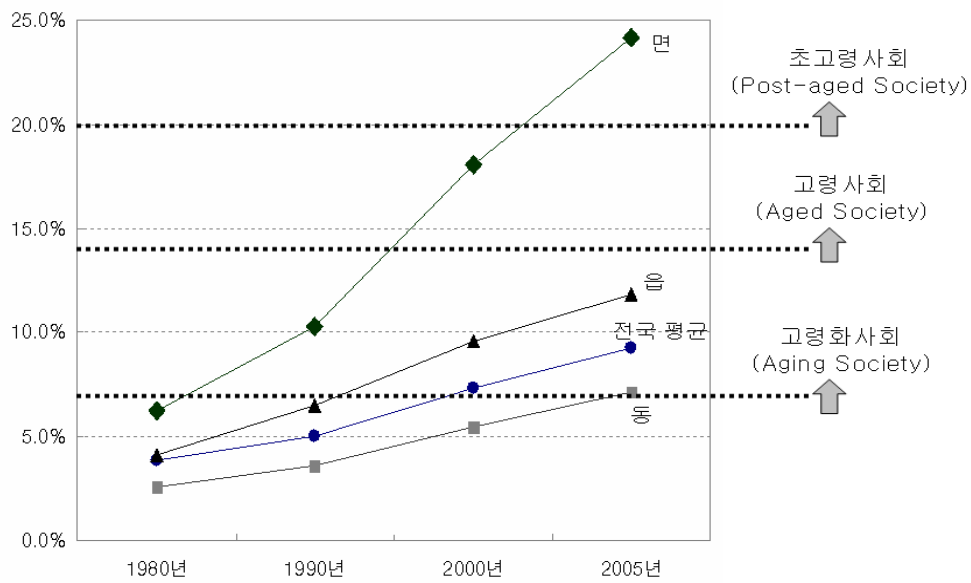
- 농촌 인구의 감소는 이촌향도형 인구이동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촌이 도시에 편입된 탓도 적지 않다.

2. 인구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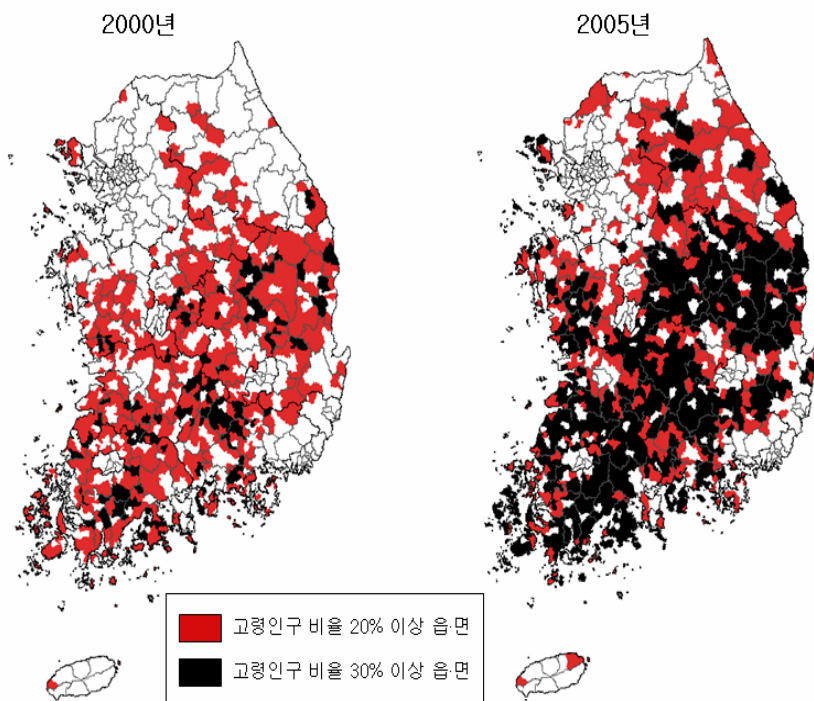
- 농촌의 인구 고령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면 지역은 이미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단계에 접어들었다.²⁾ 2005년 기준 전국 1,208개 면 중 82%인 991개 면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고 있다.³⁾

2) 200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읍 지역은 전체적으로 11.8%, 면 지역은 24.2%를 기록하였다.

3) 209개의 읍 중에서 2005년 초고령사회 단계로 분류되는 곳이 52개로 전체 읍 중 25%를 차지한다.



[그림 2] 농촌의 고령화 진행 추이



[그림 3] 고령화율로 본 농촌의 분포

3. 도시민의 농촌 지향 인구이동 추세

-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의 경우 여전히 이촌향도형 인구이동이 우세하지만, 최근 도시민의 농촌 지향 인구이동 추세가 과거에 비해 뚜렷해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

<표 3> 5년 전 거주지가 대도시인 이동인구의 현 거주지

기준 연도 현 거주지		1995년 (%)	2000년 (%)	2005년 (%)
도시	동부 전체	91.1	86.7	88.0
	-대도시	60.3	57.3	51.5
농촌	읍면 계	8.9	13.3	12.0
	-읍부	4.0	7.0	6.4
	-면부	4.9	6.4	5.6
계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통근통학편 재구성.

- 도시민의 농촌 지향 인구이동은 은퇴 연령층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인구주택총조사」 집계 결과에 의하면,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이주해온 인구 중 노년층일수록 5년 전 거주지가 대도시였던 비율이 높다. 농촌은 도시 은퇴 연령층에게 제2의 거주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5년 10월에 실시한 도시민 3,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농촌 이주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56.1%로 나타난 바 있다.

4) 2000년에 비해서 2005년에 상대적으로 읍·면부 지향 인구이동 비율이 줄어든 것에는 읍·면 행정구역 일부가 동부로 편입된 영향도 있을 것이다.

1) 도시민의 높은 농촌 이주 수요

- 향후 농촌에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도시민이 전체의 56.1%로 우리나라 도시민 2명 중 1명은 농촌 이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민의 농촌 이주 의향은 대체로 전 연령층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50대(65.0%), 여자(50.1%)보다는 남자(62.1%)가, 고졸 학력(61.5%), 자영업자(66.5%), 가구주(62.9%) 등에서 이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다.
- 한편 소득계층에 따른 농촌 이주 의향 차이는 크지 않다. 가령, 월소득 100만원 이하 계층 중 농촌 이주 의향이 약간이라도 있는 이들이 55.4%이고 월소득 400만원 이상의 계층 중 농촌 이주 의향이 약간이라도 있는 이들이 51.9%로 나타나고 있다.
- 농촌생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진 이들일수록 보다 적극적인 농촌 이주 의향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농촌생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집단과 부정적인 집단을 구분하여 이주 의향을 비교해 본 결과, 농촌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가질수록 이주 의향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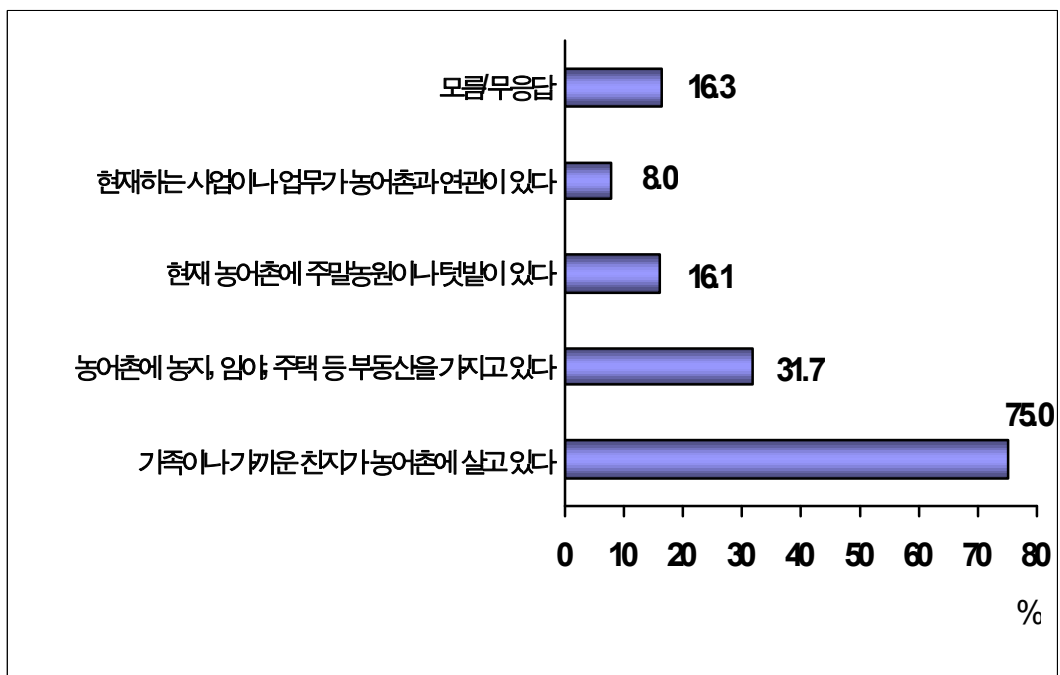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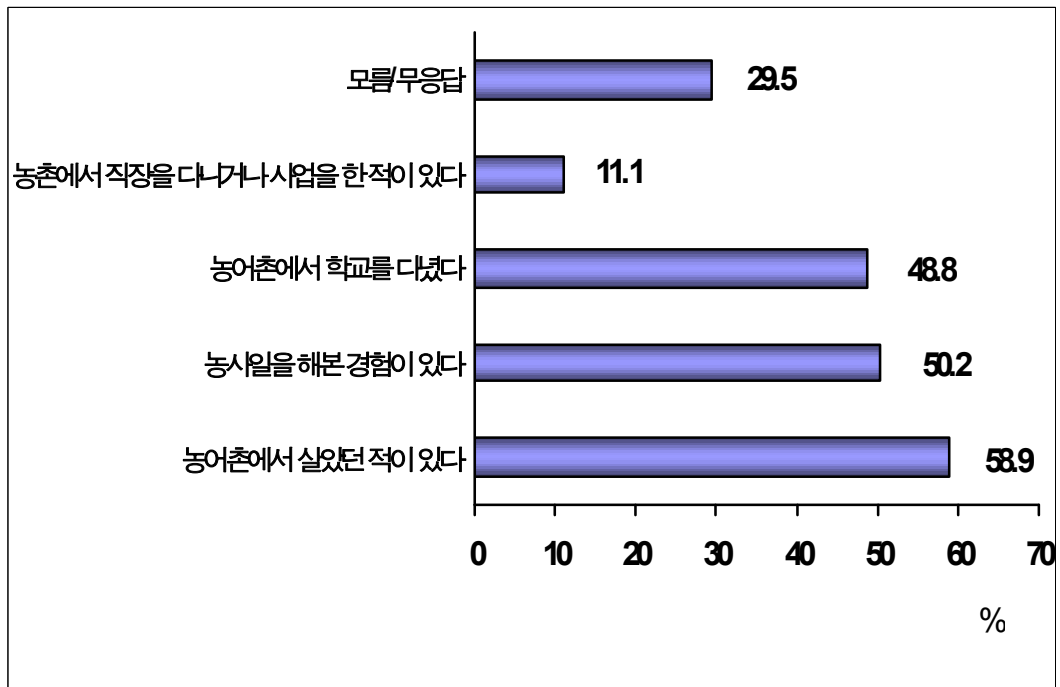
<표 4>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이주 의향

구 분	전 체	매우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부정적
(응답수)	(3000)	(511)	(765)	(789)	(637)	(298)
농촌에 이주할 의향이 아주 많음	18.6	33.8	25.9	14.7	9.8	2.5
농촌에 이주할 의향이 약간 있음	37.5	45.1	46.6	38.8	29.6	14.4
농촌에 이주할 의향이 별로 없음	23.9	16.1	16.6	27.4	30.3	32.8
농촌에 이주할 의향이 전혀 없음	19.4	4.6	10.4	18.7	28.6	50.3
모름/무응답	0.6	0.4	0.5	0.4	1.6	0.0

주: 1) 매우 긍정: 농촌에 대한 인식문항 모두에 동감한 경우
 2) 긍정: 농촌에 대한 인식문항 중 3개에 동감한 경우
 3) 보통: 농촌에 대한 인식문항 중 2개에는 동감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경우
 4) 부정: 농촌에 대한 인식문항 중 3개에 부정적인 경우
 5) 매우 부정: 농촌에 대한 인식문항 모두에 부정적인 경우

2)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 연고 및 체험

- 도시민의 58.9%는 농촌 거주경험을 가지고 있고, 75.0%는 농촌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에서의 경험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일수록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이 높다.



- 특히 농촌 체험관광 등을 위한 농촌 방문경험이 있는 이들이 이주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농촌 체험관광 방문과 이주의향

구 분	전 체	방문경험있음	방문경험없음
(응답수)	(2994)	(881)	(2113)
농촌에 이주할 의향이 아주 많음	18.6	24.4	16.1
농촌에 이주할 의향이 약간 있음	37.6	41.7	35.9
농촌에 이주할 의향이 별로 없음	23.8	18.9	25.9
농촌에 이주할 의향이 전혀 없음	19.4	14.5	21.5
모름/무응답	0.6	0.5	0.7

3) 농촌 이주를 이미 준비 중인 도시민도 상당수

- 매우 적극적으로 농촌 이주를 준비 중인 도시민은 전체의 4.7%, 어느 정도 준비하는 도시민은 18.6%에 달하고 있다. 연령이나 소득이 높을수록 준비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 농촌 이주를 위해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도시민 응답자 552명 (23.3%)은 그 준비내용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응답이 49.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저축을 하고 있다(38.3%)’, ‘이주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28.1%)’, ‘직장, 사업을 알아보고 있다(14.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농촌 생활에 대한 정보의 유통 경로는 농촌의 가족, 친지, 친구 등을 통해 듣는 개인적 경로(41.9%)가 지배적이며, 대중매체(21.5%), 인터넷(13.4%) 등이 다음을 잇고 있었다.
 - 농촌 이주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의 수요는 농촌 생활환경(27.6%) 및 농촌 주택·토지(22.3%) 관련 정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4) 가까운 장래에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 많은 편

- 5-6년 이내에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전체의 21%에 달하고, 10년 이내에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이들도 33%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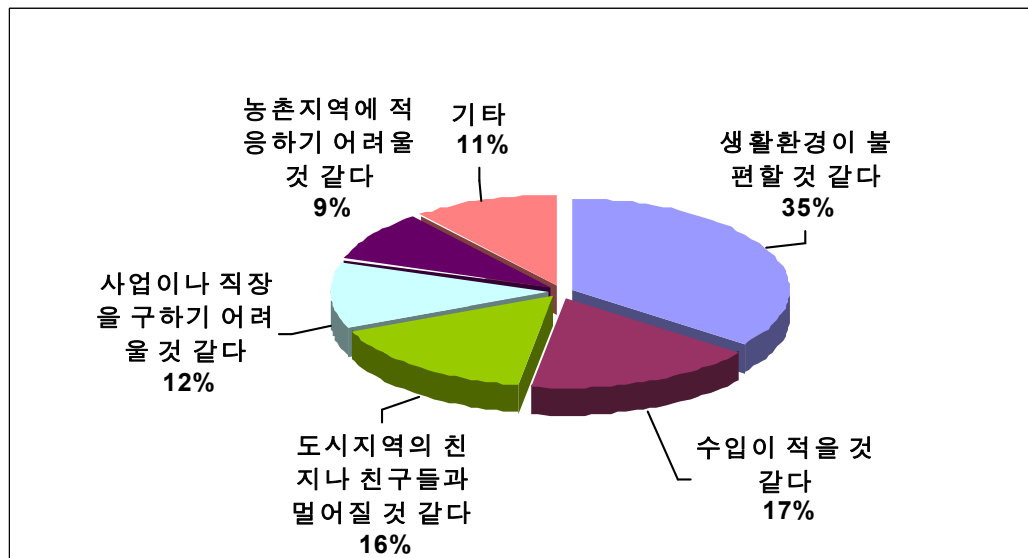
5) 선호하는 이주 희망지역은 현 거주지 인근의 자연경관이 좋은 곳

- 향후 농촌에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들은 이주 시 선호하는 지역의 유형으로 52.6%가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산업활동이나 사업여건이 좋은 지역(14.8%)', '숲이 있는 지역(12.6%)', '농사여건이 좋은 지역(8.9%)' 등을 응답하였다.
- 이들의 이주 희망 지역으로는 12.4%가 경기를 희망하였으며, 다음으로 경북(11.7%), 경남(10.7%), 강원(10.5%) 등의 순이며, 주로 현 거주지 인근 지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도시와 가까워 생활환경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33.2%)이면서, 기존의 농촌 마을(43.7%)을 상대적으로 선호하였다.
- 농촌 이주 의향을 가진 이들의 63.9%는 개인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를 희망하고 22.3%는 기존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희망하고 있다.

6) 도시민의 농촌 이주 이유는 주로 풍부한 여가생활 향유

- 도시민의 30.6%는 은퇴 후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이주를 희망하는 한편, 농촌이 가진 전원적 생활의 풍요로움을 향유하기 위해서(27.9%),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22.7%) 농촌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

- 50대 연령층의 이주 이유가 은퇴 후 여가생활 때문이라면, 20·30대 젊은 계층의 경우는 농촌이 더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농촌으로 이주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농촌생활이 상대적으로 불편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었다(33.4%). 이들 대부분은 이주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제거된다면 이주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7) 농촌 이주 후에도 경제활동 지속 의사

-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도 29.7%이지만, 농림어업 및 자영업 종사 희망자가 각각 20.7%와 21.7%, 전문직 종사 14.7%, 직장 출퇴근이 10.5%에 달하였다.
- 연령이 낮은 계층은 주로 전문직이나 자영업 종사를 희망하고, 연령이 높은 계층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농림어업 종사를 희망하고 있다.
- 농림어업 종사 희망자의 대부분은 밭농사를 희망(44.8%)하며, 자영업의 경우는 숙박 및 음식점 등으로 나타났다.

8)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요

- 교통,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으며(41.9%),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17.8%) 창출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 그러나 매우 적극적으로 혹은 약간이라도 이미 농촌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보다 높은 정책 수요는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와 규제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농촌지역 경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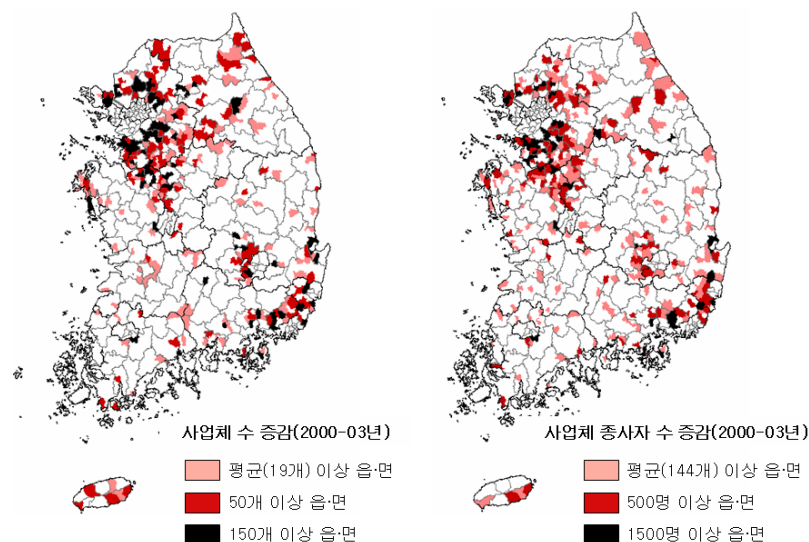
- 양질의 일자리는 도시지역에 다수 분포한다. 2001년~2004년 간 시·군·구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고용 기회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형적인 농촌이라 할 수 있는 군 지역과 신활력지역 시·군에 분포하는 일자리 수 비중은 전국 대비 7.4% 수준에 불과하다.
- 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4개 년 간 변화 추이에서 신활력지역 시·군이 연평균 4.2%씩 일자리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부 평균 일자리 증가율(매년 2.7%)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 농촌의 경제활동 양상도 다변화하고 있다. 사업체 기준으로 볼 때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이나 소매업 등의 업종은 감소 또는 정체 상태인 데 반해, 일부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음식료품 제조업 등의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가 늘고 있다.⁵⁾
- 도시 근교 농촌에서는 숙박·음식업 사업체 수 증가가 두드러진다. 그리고 자연환경 여건이 좋고 관광기반이 갖추어진 농촌에서도 숙박·음식업 사업체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에서 2003년 사이 숙박·음식업 분야에서 144개 사업체가 신규로 창업한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을 그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5) 음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 수는 줄어든 반면 종사자 수는 증가하였다.

<표 6> 읍·면 지역 사업체 부문별 성장 및 쇠퇴 현황

구 분	사업체 수 기준	종사자 수 기준
성장 부문 :상위 10개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부동산업 - 교육 서비스업 - 전문직별 공사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가구 제외)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보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교육 서비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가구 제외) - 음·식료품 제조업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전문직별 공사업
감소 부문 :하위 10개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업(자동차 제외) - 사회복지사업 -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보험 및 연금업 -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어업 - 농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금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 - 소매업(자동차 제외) -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보험 및 연금업 - 종합 건설업 - 사회복지사업 - 금융업 -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주: 2000년과 2003년 두 시점의 읍·면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감 추이 분석 결과임.
자료: 읍·면·동별 사업체 현황에 대한 통계청 원자료 활용



[그림 4]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가 읍·면의 분포 현황

- 농촌 주민들의 직업 분포가 다양해진 데서도 농촌경제의 변화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농림어업 분야 근로자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전문가, 사무직 등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무급 가족노동은 줄고 임금 근로자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7> 읍·면 지역 주민의 직업 분포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5	2.7	1.7
전문가	2.3	4.1	4.4
기술공 및 준전문가	4.7	3.1	4.5
사무직원	5.6	7.5	8.8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 종사자	11.5	14.2	13.9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53.1	45.9	41.8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7.7	6.5	7.3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8.4	9.1	10.8
단순노무직 근로자	4.6	6.2	6.0
기타	0.8	0.7	0.7
계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결과 재구성.

<표 8> 농촌지역 종사자 지위의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임금근로자	33.9	38.2	41.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7.4	36.9	36.1
고용원을 둔 사업주	3.0	3.5	3.6
무급가족종사자	25.6	21.4	18.8
계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결과 재구성.

5. 농촌의 기초 서비스 중심지 기능 변화

- 농촌 주민들이 정주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심지를 살펴보면, 대도시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는 마을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반면 원격지일수록 읍·면 소재지 이용 비율이 높다. 다만, 문화여가시설은 공통적으로 인근 지방도시 이용률이 높다.⁶⁾
- 사업체 수 증감 추이로 보면, 배후 농촌에 대한 지원 기능을 담당해야 할 농촌 중심지의 소매업 기능이 쇠퇴되고 있다. 이 현상은 대도시권 이외의 소도읍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 가령, 1999년 시·군 당 평균 3.9개이던 재래시장 및 상설시장 수가 2003년 3.7개로 줄어들었다.
- 전통적인 의미의 농촌 중심지 기능이 재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기존 읍·면 소재지 기능이 약화되면서 상당수의 중심지 기능이 인근 중심도시나 대도시에서 충족되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와의 거리가 먼 원격지 농촌의 읍·면 소재지는 정주에 필요한 기초 중심지로서의 기능 확충 필요성이 여전히 높다.
 - 경제 중심지로서보다 지역 주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기능이나 다양한 여가문화 수요에 대응하는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6) 200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주민 2천 명 대상 조사 결과

<표 9> 농촌 주민의 서비스 이용 지역(대도시 접근성별 비교)

(단위%)

서비스 구분	서비스 이용 지역	거주지와 대도시 간 시간거리			전체
		30분권	1시간권	2시간권	
교육시설	현재 거주하는 마을	43.4	35.4	25.2	31.4
	읍·면 소재지	23.8	34.2	40.9	36.1
	인근 지방도시	16.6	20.3	24.1	21.7
	대도시	14.3	7.7	7.0	8.3
	모름(무응답)	1.9	2.3	2.8	2.5
	계	100.0	100.0	100.0	100.0
보건의료 시설	현재 거주하는 마을	45.7	34.1	25.5	31.5
	읍·면 소재지	26.0	41.1	46.5	41.5
	인근 지방도시	20.0	21.0	24.2	22.5
	대도시	8.3	3.9	3.8	4.5
	모름(무응답)	0.0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소비유통 시설	현재 거주하는 마을	40.0	31.0	24.9	29.3
	읍·면 소재지	30.6	39.1	47.6	42.1
	인근 지방도시	18.9	27.3	25.5	25.1
	대도시	10.6	2.5	1.9	3.4
	모름(무응답)	0.0	0.0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문화여가 시설	현재 거주하는 마을	12.1	9.9	9.1	9.8
	읍·면 소재지	15.1	21.0	23.4	21.3
	인근 지방도시	40.8	49.7	50.6	48.8
	대도시	29.1	16.3	10.2	15.1
	모름(무응답)	3.0	3.2	6.6	4.9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재집계

<표 10> 농촌의 소매업 사업체 수 증감 추이

읍·면 분류	읍·면 수	소매업 사업체 수(개)		소매업 증감 (개)
		2000년	2003년	
대도시권 읍	32개	412.0	453.7	41.7
대도시권 외 읍	166개	330.7	305.0	△25.7
면	1219개	52.9	47.8	△5.1
읍·면 합계	1417개	93.6	87.2	△6.4

자료: 읍·면·동별 사업체 현황에 대한 통계청 원자료 활용

- 농촌 주민들의 통근·통학 패턴을 보아도 같은 시·군 내 읍·면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시·도 내 다른 시·군·구 등으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일상 생활권이 광역화되고 있는 것이다.

<표 11> 농촌 주민의 통근·통학 목적지 변화

(단위 %)

연도	현 거주지 통근·통학 유형	전국	도시 (동부)	농촌(읍·면부)		
				계	읍부	면부
2000년	통근통학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30.9	20.1	69.7	64.3	72.8
	같은 시군구 내 다른 읍면동	37.5	43.1	17.6	18.3	17.1
	같은 시도 내 다른 시군구	21.0	24.7	7.8	10.1	6.5
	다른 시도	10.6	12.2	4.9	7.3	3.6
2005년	통근통학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37.9	29.6	73.0	68.0	76.6
	같은 시군구 내 다른 읍면동	24.3	27.0	13.0	12.7	13.3
	같은 시도 내 다른 시군구	26.4	30.5	9.2	12.5	6.8
	다른 시도	11.3	12.9	4.8	6.9	3.3

자료: 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결과.

6. 농촌 주민들의 정주 의식

-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 거주지에 대한 정주 의사를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69%의 주민이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했다.
 - 주민 특성에 따라 응답 내용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젊은층일수록 고령층에 비해 도시로 떠날 것이라는 답변이 많다. 교육, 일자리 등의 이유를 들고 있으며, 7) 목적지가 대도시인 비율도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 소득 수준별로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농촌을 떠날 것이라는 비율이 높다.

7) 현 거주지를 떠나고자 하는 20-30대의 경우 약 72%가 자녀 교육, 직장 등을 이주 원인으로 들고 있다.

- 농촌 주민들의 도시 이주에는 농촌의 압출요인(pushing factor)도 작용하지만, 대도시의 흡인요인(pulling factor)이 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젊은층이나 고소득층이 도시로 떠나고자 하며, 농촌 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들도 이주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⁸⁾

<표 12> 농촌 주민의 연령 및 소득 수준별 향후 정주 의사

(단위 %)

정주 의사 \ 응답자 구분	응답자 연령			소득수준			전체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상	중	하	
계속 살 것이다	54.5	76.3	90.5	66.1	63.1	74.3	69.2
대도시지역으로 이사할 것이다	17.9	6.7	1.8	13.0	15.0	7.3	10.8
주변의 중소도시로 이주할 것이다	23.8	10.8	5.3	16.1	18.1	14.3	15.6
다른 농어촌으로 이주할 것이다	0.6	3.2	0.9	2.2	1.3	1.5	1.7
기타 또는 무응답	2.5	2.3	0.3	2.2	2.1	1.9	2.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주민 설문조사 결과.

- 농촌에 이미 이주한 도시민 조사 결과에서는 “농어촌의 생활이 도시보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현 거주지에 계속 살겠다는 비율이 더욱 높다. 또한 이웃과 교류가 많은 주민일수록 농촌에서의 정주 의사가 높게 나타난다.
- “농촌 생활의 가치”나 “공동체의 유대감” 등이 갖는 흡인요인이 농촌 정주 의사를 높이는 것이다.⁹⁾

8) 주민 조사 결과 “농어촌 생활이 도시 생활보다 더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의 현 거주지 정주 의향이 각각 70.8%와 67.9%로서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9) 농촌의 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들은 거주지 선택 동기로 “자연환경이 좋아서”라고 답한 비율이 42%였다. 농촌 생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31%가 그와 같이 응답하여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인다.

- 결국 살기 좋은 농촌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주 의사 간의 상관관계는 원래부터 농촌에 살던 주민들보다는 도시에서 농촌에 이주해온 주민들의 경우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표 13> 농촌 이주 도시민의 향후 정주 의향

(단위 %)

향후 정주의사	응답자 구분		이웃과 교류 정도			전체
	농촌 생활 인식		많음	보통	적음	
	긍정적	부정적				
계속 살 것이다	82.3	69.3	81.3	81.6	58.1	79.2
예전 살던 도시로 떠날 것이다	4.2	9.3	4.1	5.5	9.7	5.4
주변의 적합한 도시로 갈 것이다	3.4	6.7	4.1	3.1	12.9	4.4
다른 농어촌으로 갈 것이다	7.6	6.7	7.3	6.1	12.9	7.3
기타	2.5	8.0	3.3	3.7	6.5	3.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이주 도시민 설문조사 결과.

- 한편, 도시와 현 거주지의 접근성 정도에 따라서도 정주 만족도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대도시 및 중소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각종 서비스 만족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¹⁰⁾ 이는 농촌 정주 의사와도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도시민 유치’ 및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추진하는데 참고하여야 한다. 다만, 2020년 7× 9 고속간선망 구축 등이 완료되면 거의 모든 농촌이 30분 이내에 도시와의 접근성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표 14> 주요 서비스 부문별 불만족 비율(도시 접근성별 비교)

(단위 %)

서비스 부문	거주지와 대도시 시간거리			거주지와 중소도시 시간거리		
	30분권	1시간권	2시간권	30분권	1시간권	2시간권
교육시설	44.9	54.7	58.2	51.6	59.6	60.2
보건의료시설	42.3	52.7	63.1	53.2	61.4	70.2
문화여가시설	65.3	72.7	74.8	69.3	76.3	77.8
소비유통시설	38.5	46.5	54.0	45.3	53.6	60.8
정보통신기반	16.6	23.0	28.7	22.7	29.0	32.7

주: 각 서비스 항목별로 “매우 불편하다”거나 “대체로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한 값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주민 설문조사 결과.

10) 앞서 살펴보았듯 원격지일수록 읍·면 중심지 이용 비율이 높는데, 이들 중심지의 서비스 기능이 도시 근교에 비해 취약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Ⅲ. 미래 농촌의 정주 여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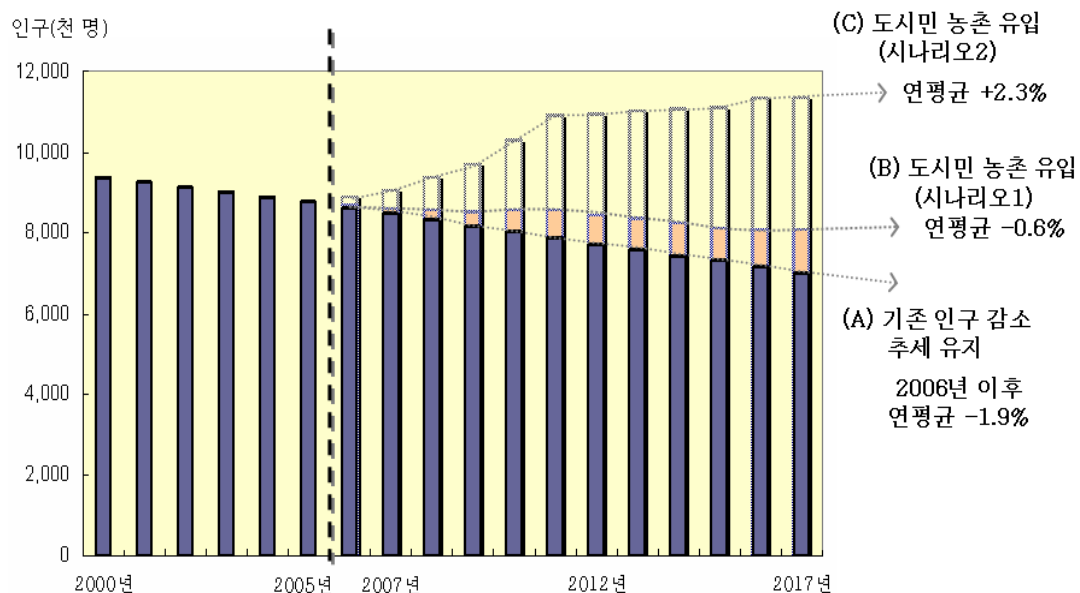
1.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 추세

- 우리 국토의 공간구조는 동·서·남해안의 역 파이(π)축과 7+1의 다핵구조로 개편될 예정이다.
- 7+1의 다핵구조는 우리국토 내부를 7+1의 경제권역으로 구분하여(1은 제주도) 각각의 특성에 따라 자립적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그간 수도권 중심의 1극 구조를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다핵연계형 구조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 광역도시간 기능적 상호보완으로 국토공간의 다핵화를 정착하는 한편, 도시와 지역의 연계 체계는 광역도시권내의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배후지역간 연계강화로 네트워크형 체계 형성을 지향할 것이다.
- 특히 7×9 격자형 고속간선망 구축이 완료되면 지역간 시간거리는 비약적으로 단축되어 전국의 모든 농촌지역에서 1시간권 이내에 도시지역과 접근이 가능하다.

2. 인구 감소세 완화와 도시민 유입 증대

- 농촌 이주 의향에 대한 도시민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미래 복합 생활공간으로서 농촌의 변화와 도시 인구 유입의 영향 등을 전망할 수 있다.
- 향후 10년 내에 농촌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자(전체 도시민 대비 26.8%) 중 구체적으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응답자(전체 대비 2.4%)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응답자(8.5%)를 2017년까지의 전망을 위한 잠재적인 이주 계층으로 분류하였다.

- 단순히 과거 추세치만을 연장할 경우, 농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18.5%에서 2017년에 14.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시민의 농촌 유입이 본격화될 경우, 감소세는 완화될 것이며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는 농촌지역의 수도 꽤 증가할 전망이다.
- 향후 10년 내 이주를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의 경우 농촌 유입이 확실시되는바, 이에 따른 증가분을 합산하면(시나리오1) 농촌 인구 감소세가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 또한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까지 본격적으로 농촌 이주를 결행한다고 낙관적으로 가정할 경우(시나리오2), 2009년에 이르면 전국 인구 대비 농촌 인구 비율이 20% 수준까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¹¹⁾
- 도시민이나 농촌 주민의 정주 의식에서도 나타나듯이 농촌의 이러한 변화 가능성의 실현은 새로운 도농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유대감을 확보하는 일이 그 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시나리오별 농촌 인구 전망

11) 실제 농촌 인구는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2 사이의 값이 될 것이다.

<표 15> 시나리오별 장래 농촌 인구 전망

(단위: 천 명)

구 분		2000년	2005년	2007년	2012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00-2005	2005 이후
전국(A)		46,136	47,279	47,592	48,207	48,452	0.5	0.2
농촌 인구	추세치(B)	9,381	8,764	8,467	7,733	6,984	-1.4	-1.9
	시나리오1(C)	9,381	8,764	8,593	8,450	8,081	상동	-0.7
	시나리오2(D)	9,381	8,764	9,032	10,953	11,365	상동	2.2
전국 대비	B/A	20.3%	18.5%	17.8%	16.0%	14.4%	-	-
	C/A	상동	상동	18.1%	17.5%	16.7%	-	-
	D/A	상동	상동	19.0%	22.7%	23.5%	-	-

3. 농촌의 정주 여건 전망과 주요 정책 쟁점

- 최근의 농촌 인구 유출은 절대빈곤을 겪던 과거와 달리 농촌의 압출요인보다 대도시의 흡인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다른 한편 농촌이 지닌 매력요소에 의해 농촌 이주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도시민도 늘었다. 즉 농촌이 “살기 좋은”터전으로 변모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 국토 간선망의 지속적인 확충과 이동성 증대 등에 힘입어 농촌 주민의 일상 생활권은 더욱 광역화될 전망이다. 읍·면 소재지의 중심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선별적인 정책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도시로부터의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기초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 주로 대도시권에 위치한 몇몇 읍 중심지들은 배후 농촌 주민들의 거주지로서 기능하여 인구 증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에 따라 ‘시가화지역’으로 변모하여 장차 도시지역에 편입되는 읍들이 속출할 것이다.

- 실제로 농촌 주민들의 인구이동 양상을 보면, 최근 들어 대도시 지향 경향이 완화되고 농촌 읍·면으로의 수평적 이동 경향이 커지고 있다. 그 중 특히 읍으로의 거주지 이동 패턴도 미세하게나마 증가하고 있다.

<표 16> 5년 전 거주지가 농촌(군부)인 이동인구의 현 거주지

(단위 %)

기준년도		1995년	2000년	2005년
현 거주지				
도시	동부	84.7	79.9	80.8
	-대도시	43.7	36.9	36.3
농촌	읍면 계	15.3	20.1	19.2
	-읍부	6.7	9.4	9.6
	-면부	8.5	10.7	9.7
계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인구이동편 재집계.

- 도시 접근성이 불리한 지역에 위치한 상당수 읍·면 중심지들은 인구 감소와 더불어 중심지 기능의 저하 현상이 함께 나타날 것이다.
- 인구와 업종별 사업체 수의 상관관계를 읍·면별로 살펴보면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서비스업(이용 및 미용실 등)에서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난다.¹²⁾ 특히 인구 감소 폭이 큰 면 지역에서는 일상적인 지역 내의 수요에 의존하는 업종의 사업체 수는 더욱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¹³⁾
- 그렇기 때문에 원격지일수록 몇몇 읍·면 중심지들을 선별해서 육성할 필요성은 더 커진다. 그러한 지역의 경우 도시 주변 농촌에 비해 주민들의 일상 생활권이 주변 도시보다 읍·면 소재지에서 형성되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12) 면 지역의 경우 인구와 사업체 수의 상관관계는 소매업(0.710), 숙박 및 음식점업(0.629), 교육서비스업(0.842), 기타 서비스업(0.781) 등으로 나타났다.

13) 반면에 외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관련 산업은 확대 가능성이 높다.

- 서비스 이용권역이 광역화되고 중심지 기능이 약화되면, 개인적인 이동성에 제한이 있는 고령인구나 여성 등 교통 취약계층에게 특히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순회 교통수단 등을 지원할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 농촌의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복지 관련 서비스 수요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그리고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 발굴 등 지역가꾸기 차원의 사업 수요도 높아질 것이다.
- 농촌의 공동체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도시민 유치'와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중요한 관건이 되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정책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기존의 공공 주도 서비스 공급에서 벗어나 주민참여 등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전달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 등의 부대 효과도 나오기 때문이다.

IV. ‘농촌의 인구 늘리기’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선택적 사례

○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동향

- 담양, 의령, 제천, 상주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 일환의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나 마을종합개발사업과 같은 정책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도시민과 농촌 주민이 함께 어울려 사는 복합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관련 부처 사업을 패키지화시키는 내용이다. 그 밖에 전국 55개 지구에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최근에 시작된 것으로, 농촌정책 영역에서 농촌 정주인구의 문제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서 본격화·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농촌 정주 의향을 가진 도시민에게 적합한 하드웨어적 정비는 이러한 정책에 있어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주인구의 유치와 그들의 지역사회 적응, 사업대상지역에서의 사회적 통합 등을 촉진하는 소프트웨어적 정책 프로그램 또한 그에 못지않게 긴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다. 아직은 농어촌종합정보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도시민 정주 관련 정보 서비스 이외에 아직은 적합한 수단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 지자체가 도시민을 해당 지역에 유치하는데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계획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금번 “지자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프로그램 시범사업(‘07-’09)”이 유일하다.
 - 농림부에서는 2007년 4월 30일까지 각 시·군의 사업계획을 공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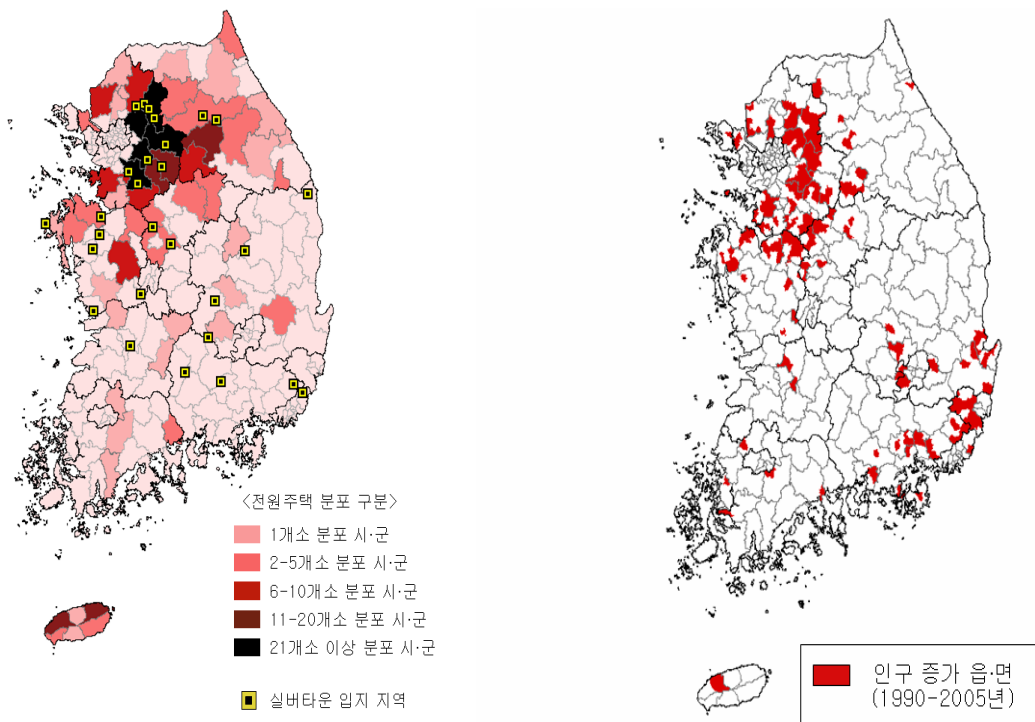
< “지자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프로그램”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범위 >

- ◆ **시·군/읍·면:** 출향인사 파악·관리·홍보, 귀향의 날 등 행사, 전원 마을 조성 관련 컨설팅·대상지역조사·입주수요조사 홍보, 전문인력(지역 개발, 유통, 예술인) 등에게 지급하는 컨설팅 비용, 이주도시민 지역사회 기여·자원봉사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 컨설팅은 3년간 1억원 범위내에서 집행, 1년에 1인당 1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 **인구유치마을:** 빈집 등 주거정보·농지정보 제공 및 갱신, 이주예정 도시민 사전 교류·초청행사, 이주도시민 후견인 지정·운영
- ◆ **지역사회단체·농협:** 이주 도시민의 일자리 알선·교육·홍보
- ◆ **지역교육기관:** 전원생활체험·지역이해 교육프로그램 등 기획·운영
- ※ 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10억원 한도 외에서 추진할 수 있으며,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프로그램 계획 포함 가능

○ 지자체 및 단체의 관련 동향

-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가면서 농촌지역의 거의 모든 시·군이 지역개발 및 인구감소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부분 귀농자에 대한 지원이며, 특별히 일반 도시민의 이주 촉진 방안을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알선센터를 설치하여 상담부터 영농정착까지 지원(전남)
- 도 농업기술원에 귀농강좌 개설 및 귀농자 중 50명을 선정하여 선도농가 현장실습시 1인당 월 30만 원 지원(전남)
- 빈집 알선(태안, 고창, 곡성, 의령 등) 및 빈집 정착시 수선비 지원(전남 250만 원, 영광 40만 원, 상주시 동당 500만 원, 하동 1천만 원 이내)
- 귀농어가에 정착자금 융자(전남 65세 이하에 5천만 원 내 융자) 및 정책자금 이차보전(상주시)

- 상당수의 지자체가 인구 감소를 완화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급, 영유아 육아지원 등을 시행. 예컨대 경북 예천군은 35세 이상의 농촌 노총각을 대상으로 맞선 주선은 물론 결혼·정착까지 일괄 지원하는 ‘농촌 노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충북 증평군은 출산장려용품 지원, 농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농가 도우미제,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농촌 인구 유입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부터는 농협충북지역 본부와 업무 제휴를 맺고 군에서 태어난 모든 어린이들에게 건강보험을 무료로 가입
- 기업체 임직원과 대학생 전입에 대해 기업과 학생회에 규모별로 장려금 지급(예산군: 50만~500만 원) 또는 차량등록비 및 장학금 지원(홍성군)
- 기타 전입자의 새로운 마을 조성에 지자체가 도로·전기·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비 보조(경남 남해군 독일마을, 전북 장수군 하늘소마을 등)
- 몇몇 민간기구에서는 도시민의 농촌정주를 위해 나름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령, 한국농촌공사의 도농교류센터, 농협의 농촌사랑 범국민운동, 전국귀농운동본부와 불교 귀농학교 및 실상사 귀농학교의 귀농교육 등을 들 수 있다.
- 한편, 최근 들어 주로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전원주택이나 실버타운 입지가 증가하고 있다. 충남 홍성군 은퇴농장, 경남 남해 독일마을, 경남 산청 안솔기마을 및 경남 함양 청미래마을, 전북 장수군 하늘소마을 등이 관련 사례로서 거론되고는 있으나 일반적인 사례가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로 대부분 농촌지역에서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도시민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전원주택 및 실버타운 분포

▶ 인구증가 농촌지역 분포

[그림 6] 전원주택 분포와 인구증가 농촌지역 분포



▶ 독일마을, 안솔기마을, 하늘소마을, 은퇴농장 순

[그림 7]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를 위한 사업 사례

V.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정책 환경의 변화와 지방의 정책 과제

- 미래 농촌의 정주 여건은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교통이 발달하고 일상 생활권이 더욱 광역화되겠지만, 고령화되고 분산된 농촌 거주 인구에게 보다 편리한 정주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간구조의 재편’ 및 ‘찾아가는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획, 실행해야 한다.
- 미래 농촌의 내부 구성원 역시 기존 주민과 신규 유입된 주민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농촌에서 새로운 정주를 시작하려는 계층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지역 나름의 다양한 대책을 구상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공동체가 융합할 수 있는 세심한 프로그램도 실행해야 한다.
- 도시민 유입 및 외국인 유입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 농촌의 산업구조 변화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농림어업은 외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과의 연관성을 더욱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 농업의 서비스 산업과의 결합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미래 농촌의 과제들을 지역 여건에 맞게 디자인하고 현장에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내·외의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주체가 조직화되어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농촌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 이미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이러한 농촌 만들기를 시도하고 있는 사례들에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공통된 시사점을 읽을 수 있다.

- 미래 농촌을 긍정적으로 재편하는데 지방의 농촌정책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도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여러 지자체마다 해당 지방의 창조적 매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다양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가운데, 농촌의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를 인구 문제로 간주하고, 지자체가 도시민을 유치하고자 할 때 중앙정부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코자 하고 있다.
- 중앙정부는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각 지역에 적합한 대안을 지자체가 창의적으로 발굴하고 의욕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이다.
- 농촌에 체재, 정주하려는 도시민의 수요가 농촌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 전환이 정책 담당자나 농촌 주민 모두에게 필요하다. 도시민이 이주해 와도 농촌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거나 혹은 사회적 갈등이나 공동체 해체 등과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으나 그것은 농촌의 정주여건이 충실하지 않고 경험의 일천함에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뿐이다.
- 유럽(스코틀랜드)의 경우 경제활동 능력을 지닌 가구 하나가 이주할 경우 0.52개의 일자리가 농촌에 만들어진다는 실증 연구가 있다.
- 도시민의 농촌 지향 수요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 영역 개척도 가시화되는 시점이므로 각 지자체 나름의 보다 적극적 대응이 요청된다.
-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제반 노력
- 농촌, 특정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 제공 노력과 농촌 체험 프로그램 등의 적극적 실행
- 다양한 농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및 이주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체계 구축

- 경관보전 및 관리 정책의 강화
 - 쾌적한 환경과 경관의 형성, 유지는 농촌관광 등과 같은 체재형 수요를 유인하여 농촌의 소득원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들어와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역에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데도 필수적인 요건
- 농촌의 정주체계에 적합한 생활환경 정비 정책
 - 기초 생활환경 정비
 - 읍·면 소재지 기능 강화 등
- 그렇다면 금산군은 사정이 어떠한가. 도시민에게 금산군은 방문지로서, 정주지로서 많은 매력을 가진 곳인가. 도시민의 체재와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서 금산군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 도시 근교라는 입지적 장점
-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 이미지
- 인삼의 집적지로서 '건강'수요 흡수 가능성 등
- 요컨대 농촌에서 체재, 정주코자 하는 도시민들의 수요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매력 있는 농촌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 지역마다 편리한 생활기반, 쾌적한 환경, 아름다운 경관, 개성 있는 문화 등 보유한 자원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발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력 있는 농촌 만들기의 요체이다. 매력 있는 농촌 만들기는 외부 사람들에게 가보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작업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현재 농촌 주민의 삶의 복지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